

Online Series

2022. 03. 31. | CO 22-08

북한의 ICBM 도발: 평가와 전망

정 성 윤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은 지정학적 위기와 남한의 권력교체기를 미·북 교착상황을 타개할 적기로 보고 ICBM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군사적·외교적·안보적·국내정치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교착국면의 구조화와 장기화를 촉진해 북한의 전략적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향후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정세 주도권은 약화될 것이며, 북한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신냉전체제 구축도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공은 북한의 손을 떠난 적이 없음을 북한이 냉철히 되돌아보고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도입

북한이 3월 24일 ICBM 실험을 재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3월 25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나, 한미 당국은 기존 화성-15형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ICBM 발사체 유형과는 상관없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도발을 자행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한 모라토리움(핵·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 moratorium)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¹⁾ 미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왔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였고, 한반도 정세는 2017년 강대강 상황으로 역진(逆進)될 상황에 봉착했다. ICBM 도발과 같은 국가의 군사적 행동은 대체로 환경, 능력, 목표, 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ICBM 도발을 상기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더불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CBM 도발 배경

북한이 ICBM 도발을 강행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2019년 하반기 이후 구축된 미·북 교착상황이다. 지난 3년 가까이 진행된 교착국면은 북한에게는 전략적 손실 기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피해와 고통은 가중되었지만, 동기간 자신들은 핵 능력 증강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 시계는 자신이 돌리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착국면이 구조화·장기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공간은 점차 협소해졌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불리한 교착환경은 북한 지도부가 속히 풀어버려야 할 무거운 족쇄였을 것이다.

둘째, 불리한 교착국면을 타개할 적기가 도래했다.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시하는 전략적 요충지 중동과 유럽에서 연이어 중대한 안보 도전 요인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유라시아 지역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핵심 전장(戰場)이다. 이 지역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관심과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북한은 전략적 기회로 포착했을 것이다. 아울러 유라시아의 위기 과정에서 조성된 미국과 중·러의 갈등 구도를 명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 핵 능력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정권

1) 북한은 이미 2년 전 2020년 1월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움 파기 의사를 시사했다.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先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後 비핵화 협상’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도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이 지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조건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당시 비핵화 타협을 사실상 접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피력하며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지킬 의사도 없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자세는 2022년 1월 정치국 회의를 통한 모라토리움 파기 시사로 이어졌다.

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 등장 전후 예외 없이 핵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해 왔다.²⁾ 군사·안보적 목적 이외에도 한미 양국의 북핵 평가와 대북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와 새정부 출범을 앞둔 남한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2022년 상반기는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전략적 가치와 다목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ICBM 도발 이유

북한이 ICBM 도발을 강행한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구조적·지역적·대미·대남 차원의 환경이 동시에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북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CBM 도발을 강행했다.

군사적 목적: 재래식 전력 열세 만회

우선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도발을 강행했다. 핵심은 국방력 강화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핵전력 증강 사업에 매진했다.³⁾ 하지만 2017년 11월 말 북한은 ICBM과 SLBM 제조·운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히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4년여 동안 미국을 직접 겨냥한 핵전력 고도화 노력 대신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능력 증강에 집중해 왔다.⁴⁾ 이에 비해 한국은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⁵⁾ 남한의 이러한 전력증강에 대항해 북한은 당연히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능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북한은 대안으로 공격용 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전념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4년간은 대남 재래식 군사력 불균형 심화 시기였던 셈이다.

-
- 2) 북한은 한미 양국의 권력 교체기였던 2012년~2013년,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4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그들이 개발 중인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실험했다.
 - 3)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통합 핵전력은 법·제도적 기반, 핵물질 확보, 핵탄두 제조 기술·운반체계(탄도미사일 제조) 확보, 핵전략(핵 태세) 구축, 핵 운용체계 확립 등으로 구성된다.
 - 4) 이는 북한이 지난 4년간 고출력 엔진, 대기권 재진입, 정밀항행 등 ICBM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5) 한국은 2019년 첨단 F-35A 8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총 40대를 도입했다. 아울러 2021년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 시제기를 출고하는 등 공군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20년 7월 그간 미사일 능력 향상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고, 한반도 전장을 상징한 다양한 첨단 공격·방어용 미사일 능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즉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취약성은 부각된 반면, 한국의 대북 군사 강압 능력은 증가했다. 2019년 하반기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북한은 군사력 취약성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한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 때 화성-17형을 공개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5대 과제와 전술핵무기 능력 확보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핵전력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중대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최근 ICBM 도발은 이러한 전략적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능력 증강 계획의 일환이다.⁶⁾

안보전략적 목적: 확증보복형 태세 강화

북한은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ICBM 도발을 강행했다. 안보전략은 군사능력과 조응한다. 북한 안보전략의 목표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정권과 국가의 생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보전략의 방향은 유사시 패망 거부와 평상시 안보위협 요소의 적극 억지이다. 전자를 위해 전술핵무기가, 후자를 위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무기가 유용하다는 것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판단이다.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략핵무기 고도화 중심의 5대 과제와 전술핵무기 능력 증강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이 빈약한 자원과 한정된 핵물질 생산 등으로 두 가지 능력 확보를 동시에 그리고 단기간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다목적 활용 실험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안보전략 중심에는 핵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확증보복형(assured retaliation) 태세임이 유력하다. 확증보복형 태세의 핵심은 ICBM과 SLBM을 활용한 2차 타격 능력의 확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은 2차 타격 능력 확보가 필수인 북한의 핵전략 구축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외교전략적 목적: 강압전략과 썬기전략 구현

북한은 ICBM 도발을 통해 외교적 차원의 효용 또한 기대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6)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해 두 가지 전략적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건지하며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방안과 모라토리움을 깨고 전략핵무기 증강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부정적 과장을 감내하며 후자를 채택했다. 전자의 경우 9.19 군사합의를 지키며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할 무기체계 확보에 안보 재원을 전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사시 한미 재래식 전력에 대한 거부 능력 강화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결국 전략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안보를 외교와 묶어 '한방에' 해결하려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핵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뿐 아니라 외교적 목적도 지향해 왔다. 북한의 외교적 목적은 강압전략(coercion strategy)과 쐐기전략(wedge strategy)으로 발현되고 있다. 먼저 김정은 정권은 ICBM 실험이라는 핵 강압을 통해 미국의 의지·태도·정책의 변화를 적극 모색 중이다. 핵 강압의 요체는 고도화된 핵 능력의 실체와 공세적 위협이다. 핵 능력을 맹신하고 있는 북한은 2018년 미국이 협상에 임한 이유가 핵 강압전략의 성공 때문이라 자평했을 것이다.⁷⁾ 이러한 핵무기 ‘집착 효과(endowment effect)’는 이후 미·북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높은 대가 요구로 이어졌다. 즉 협상이 불만족스러우면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협상 게임을 하는 것이 이롭다고 평가하고 있다.

쐐기전략은 위협적 안보 동맹의 약화가 목적이다. 즉 새롭게 출범하는 남한의 새정부와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ICBM 고각 발사로 미 본토와 남한에 대한 직접 타격 위협을 높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관여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한국 보수 정부와의 정책적 마찰이 촉발될 여지가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물론 최근 미국의 중·러와의 관계 악화를 활용해 한·미·일 연합에 대한 대항 동맹 공고화 효과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국내정치적 목적: 대내 결속력 강화

마지막으로 북한은 대내 정치적 목적도 고려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타협이 실패한 이후 대북제재·코로나 19·자연재해 등 소위 3중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김정일 시기 때처럼 고통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의 탐욕과 배신으로 돌렸다.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전형적인 전략(rally around flag)을 재연한 것이다. 북한의 관영매체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 제국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남한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언사의 비난을 동원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대내적 위기를 돌파하는 주요 수단으로 핵 능력 강화를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정일 생일 80주기를 며칠 앞둔 2022년 2월 11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의 대표적 업적으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를 언급하며 ‘고난의 시기 핵 개발’을 적극 찬양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 ICBM 도발을 통해 대내 정치적 효용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평가 이유는 바로 ICBM 도발을 공식적으로 화성-17형이라 강조한 점이다. 2년 전 공개했던 새로운 무기체계

7) 반면 미국은 당시 자신들의 체재 능력 때문에 북한이 성공하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타협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의 ‘실존’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늦지 않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1년 전 천명했던 전략무기 개발 약속에 대한 실적을 공개할 시기도 도래했다. 즉 고통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겨냥한 더욱 강력한 무기가 실존할 뿐 아니라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애민·애국정신으로 무장된 강력한 지도자상을 확립하고자 했을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화성-15형과 17형의 차이는 지난 4년여 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하에, 무리하게 화성-15형을 17형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ICBM 도발의 평가와 전망

북한의 ICBM 도발은 어떠한 효과를 과급하고 촉진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북한의 군사·안보·외교적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재래식 국방력 약화

먼저 북한의 이번 도발로 북핵 정세의 교착상황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미·북 관계는 능력(핵 능력과 제재 능력), 전략(상호 강압전략), 해법(비핵화 방법론)의 충돌과 경합으로 인해 어느 일방도 신속히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교착상황이 구축되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핵 능력 증강과 강압의 재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의 타협에만 관심이 있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맞대응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북한이 증강된 핵 능력에 걸맞은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 해법의 수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며칠 전 ‘장기화 대비’를 피력했듯이, 북한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정세에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착국면 장기화는 북한에게 불리하다. 제재로 인해 국가 실패화가 가중되어 군수 부문에 가용할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남한과 한미동맹에 맞설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전장에서 핵무기 사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안보 목적을 빈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능력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강화도 요구된다. 북한에게 필요한 재래식 전력은 자신의 군사적 취약성 보완에 우선 집중해야 함에도, 북한은 오히려 강점이 있는 공격용 미사일 능력의 집중 강화로 전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한다.⁸⁾ 하지만 이는 선제타격 등 일부 상황에 효용은 기대할 수 있으나,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공세에 대한 거부(denial) 능력 확보에 중대한 장애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⁹⁾

북한의 핵 도발 드라이브 강화

당분간 북한의 다양한 핵 강압 드라이브로 인해 북핵 정세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북한은 할 수 있는 실험과 할 수 없어도 기만할 수 있는 실험 모두를 적극 실행할 것이다. 앞서 강조한 군사·안보·외교·정치적 목적을 단기간 그리고 한꺼번에 달성하고, 화성-17형 기만극으로 초래된 체면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그리고 북한 스스로가 최근 강조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핵 능력 고도화 실험은 크게 4가지 차원이다. 초대형 핵탄두 공개·실제 화성-17형 실험 재개·신형 잠수함 완성 선포 및 공개·전술핵무기 능력 시연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북한의 고위력 추가 핵실험은 여건상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불필요하며 전략적 차원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북한이 2021년 이후 기존의 핵탄두 표준화 목표였던 소형화·경량화 방침을 뒤로하고 대형화·고위력화(다탄두)에 천착하고 있는 이유에는 MD 무력화·공포감 극대화·대미협상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는 2차 타격 능력의 확보와는 거의 무관하며 오히려 사전 탐지로 인한 선제타격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관련 기술을 단기간 신뢰성 있게 확보할지도 의문이다.

가장 중요한 현실적 난관은 핵실험장 붕괴 가능성이다. 2016년 이후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핵실험장 붕괴 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해 북한 전역과 중국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북한은 실제 과거 5차 핵실험 당시에도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¹⁰⁾ 동해상 수중 핵실험은 러시아의 일부 지역과 어업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2017년 북한이 호기롭게 천명했던 태평양 상공의 대기 핵실험은 자칫 미국의 MD 시스템의 작동 등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다만 북한이 갱도 보강 작업을 통해 중규모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 결과를 과장할 가능성은 있다. 혹은 핵실험장

8)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은 ICBM 발사 성공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건설 목표를...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능력이라고.....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수 있다.”라고 말하며 국방부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9)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 중심의 전력 편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만간 전략군 지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위상 강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사령관 계급을 별 4개로 다시 환원하고 1만 명 수준의 병력도 확충할 가능성이 있다.

10)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 당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 및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고 이례적으로 핵실험 통제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의 안전성을 고려해 전술핵무기 실험을 하거나,¹¹⁾ 핵 물질 촉발 실험이 필요 없는 ‘임계 전 핵실험(subcritical experiment)’¹²⁾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대형 핵탄두 모형(dummy)을 정밀 제작해 이를 추후 열병식에서 공개하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정세 주도권 강화 실패

북한이 교착국면을 강력한 핵 도발 드라이브로 돌파하려는 이유에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새롭게 출범하는 남한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고 아직도 구체화 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설계에 간섭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설사 도발을 통한 상황 확대(escalation)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목표로 한 만큼의 정세 주도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새정부 또한 원칙 있는 힘을 통한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국들의 강력한 대응의 기저에는 북한 지도부 스스로가 자초한 핵 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신뢰는 핵 강압의 효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북한 핵 강압의 효용은 핵 고도화 능력에 대한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신뢰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ICBM 발사가 실제 김정은이 주도 혹은 용인한 상황에서 고의로 화성-17형으로 가장한 기만책이었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가 핵 능력의 허상을 실제화해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강제적 협박(compelled blackmail)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능력(capability)을 과장해 핵 능력에 대한 신뢰(credibility) 부족을 자초했고, 이는 핵 억제력 구성의 충분조건을 훼손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 강압 능력에 대한 신뢰 손상은 미국과 한국 등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추동한다. 즉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정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11) 전술핵무기 실험은 군사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발 여부가 결정되고 실험 방식이 확정될 것이다. 일각의 예상처럼 수십 kt 급 전술핵무기 개발은 북한 입장에서 불필요하고 비능률적이다. 같은 핵 물질을 활용해 전술핵무기 1기보다 전략핵무기가 훨씬 전략적 효용이 크기 때문이다.

12) ‘임계 전 핵실험’은 실제 핵폭발 없이 핵물질과 폭양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험의 일종이다. 즉 핵물질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직전 상태까지 충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주로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이 기존 핵무기를 개량할 때 계산만큼의 성능을 발휘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종 사용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스라엘은 이 실험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의 핵 군비 조기 통제 거부

이번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 집착 효과는 비핵화 타협을 어렵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 양보를 얻고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ICBM 도발을 강행했다면, 이는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타협에 대한 유인책과 보상을 제공하는 데 더욱 인색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016년 이후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보면, 북한은 강대국 국면에서는 정세 주도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제압하기 위해, 타협국면에서는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해 고도화된 핵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미국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단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큰 양보를 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로 인해 비핵화 타협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이다.

비핵화 타협이 난망한 상황에서, 확증보복형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핵 군비를 제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러 이유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최대한 핵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와 실행을 거부하거나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타협의 형식과 과정이 무엇이든 그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³⁾ 일각에서는 북한이 확증보복전략보다 덜 신중한 비대칭확전전략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ICBM, SLBM 등의 전략무기 이외에 다양하고 충분한 전술핵무기도 필요로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대칭확전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걸맞은 핵전력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북한이 핵 군비 통제 협력을 거부할 가능성은 똑같이 높다.

북한의 신냉전 형성 기대 가능성 희박

북한의 ICBM 도발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썩기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지금까지

13) 향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의 강도를 최대한 높일 것이다. 확증보복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핵 선제 불사용(no-first use) 원칙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스로 핵 능력의 제한적 유용성을 강조해 미국과의 군축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이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2차 타격 능력이 확보되고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한 후 일부 핵 능력 보존을 전제로 한 것이지,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핵문제는 북·중·러 협력의 장애물이었지 협력의 촉진제가 아니었다. 반면 북핵 문제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할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 침해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한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충분히 후원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는 안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취약성 극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령 러시아가 보유한 S-300, S-400 등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에게 제공되기 어렵다.

설사 북·중·러 삼국 협력이 단기간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공고화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미국 혹은 한·미·일 3각 공조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쉼기전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전망과는 별도로 북한의 신냉전에 대한 허황된 기대 자체가 북한 스스로 지속적인 도발 필요성을 각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론

북한과의 치열한 핵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향후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북한의 목적과 구체적 전략을 더욱 명확히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적 불필요성과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대형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정치·외교적 효과에도 민감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술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집중한다면 상대적으로 군사적 효용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발의 유형과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 여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이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비핵화 타협을 방해한다. 비핵화 타협이 지연되면 될수록 북한의 피해는 가중되고 전략적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주변 4대 강대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무엇보다 한국이 머리 위에 핵무기를 짊어지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핵 비확산체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비핵국가가 핵 능력을 동원해 강대국 강압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 비핵국가의 핵보유 결심을 좌절시키는 것 또한 지극히 힘든 일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인접 국가를 그냥 지켜만 봤던 국가도 없었고, 그 국가가 한국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제

국제사회와 한국은 어렵고 성공 가능성 낮은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혹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더라도, 이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¹⁴⁾ 오히려 이 경우 국제사회의 장기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 노력이 강화되어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불리한 여건만 형성될 뿐이다. 새정부의 등장에 맞추어 북한이 ICBM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하늘 너머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 평화의 공은 북한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4) 북한의 핵 고도화가 더욱 강화되어 핵무기 실전 배치의 단계에 접어들면 한국은 전술핵무기 보유를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술핵무기는 남북한 모두 공통의 전략적 효용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전술핵무기로 의도치 않은 확전을 차단할 수 있는 거부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상대의 선제타격 필요성을 자극해 오히려 확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